

# 포르말린 방류 미국인 실형 선고

미군 당국의 비협조로 3년반 가까이 재판이 지연됐던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앤버트 맥팔랜드(58)씨에 대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시도한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맥팔랜드씨의 불성실한 태도와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검찰의 별금형 구형보다 훨씬 높은 실형을 선고, 엄정한 처벌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미당국의 주장과 달리 평화시 비공무수행중 범죄는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지난 1월 9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맥팔랜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미 군속 등의 경우 미 영내에서는 압수나 체포 등을 집행할 수 없고 영외에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미군 측에 신병을 넘겨야 하며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수 없다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당장 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할규정에 의거, 한국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SOFA 등 제규정은 평화시 비공무수행중 범죄는 한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공무수행 중 벌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재판권은 한국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 당국은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재판권 행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장 첫 송달 불능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파악 등 이유로 공소

장 전달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전문교육까지 받아 포르말린이 유해한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하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강에 방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 진행상황을 알면서도 소송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해서도 변명으로 일관,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맥팔랜드씨는 포름알데히드와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 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000년 7월 녹색연합에 의해 고발됐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기소 결정을 떠넘기다 이듬해 3월에야 별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 "수돗물 불소화' 안전 검증안돼"

시민단체 오세영씨 "일방시행 중단 큰 의미"

'수돗물 불소화반대국민연대' 오세영(32)사무국장은 청주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 중단조치에 대해 "22년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시민들의 자각에 의해 중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했다.

오 사무국장은 불소화 사업이 중단돼야 할 첫째 이유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그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현재 세계 2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불소이온이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정리되지 않은 상태"며 "불소이온을 먹는 것보다 치

약 등으로 직접 이를 닦는 것이 충치예방에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오사무국장은 또 불소투입 수돗물의 안전성과 유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시행돼온 점을 사업 중단의 명분으로 꼽았다. 그는 "불소화 수돗물은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 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포항시와 과천시가 불소수돗물 사업을 중단한 것도 시민의사와 관계없이 시행해오다 반발을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충치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으로 불소화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역시 수질 등 지역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고 덧붙였다.[문화일보]

## 서울대 원전센터 반대움직임 구체화

서울대 교수들의 원전센터 유치 제안과 관련,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관악구청은 지역 주민 대표와 구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지난 1월 9일 관악구청에서 열고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구청측은 또 관악산을 접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와 안양시, 과천시와도 서울대 원전센터 제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서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악산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관악구민에 고통을 안겨준 서울대의 일부 교수들이 원전 유치를 제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관악산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이후 용 대표는 "원전 센터 망언을 한 교수들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 신고를 관악 경찰서에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전센터 유치 제안에 참여한 한 서울대 교

수는 "우리의 생각을 총장께 전의한 것일 뿐 인데 지자체들이 자신들과 상의없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9]

## 건교부 경인운하 사업 포기… 1520억원 손실

건설교통부는 경인운하의 민자사업자인 경인운하(주)와의 계약을 공식 해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그동안 경인운하(주)가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한 1520억원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사업 계약 해지 원인이 정부에 있을 경우, 투자비 전액을 사업자에 돌려주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과장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건교부는 운하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홍수 방지를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만 추진키로 했다.

## 새집이 무서워 시청자 충격

SBS "환경의 역습" 다큐로 20%의 높은 시청률

"방송이 끝나자 아파트 단지에 (환기를 위해) 동시에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지난 1월 3일 방송된 SBS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환경의 역습"(연출 박정훈)의 반응이 뜨겁다.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된 각종 화학물질의 가공할 위협을 다룬 1부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는 심야시간대(밤 11시)에 방송됐는데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로는 보기 드물게 20.2%(닐슨미디어서치 집계)의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1부는 "새집 증후군"(Sick Home Syndrome), 더 나아가 화학물질이 몸에 닿거나 냄새만 맡아도 두드러기 구토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는 "화학물질과민증"(Multi) 환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통해 과도한 "석유문명" 의존이

낳은 불행한 결과를 경고했다.

방송 직후 SBS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경험담, "곧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환기 외에 "새 집 중후군"을 예방할 방법을 알려 달라"는 문의 등 300여 건의 시청소감이 올라왔고, 제작진에게도 재방송 및 녹화 테이프 구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폭주했다. 빨 빼른 한 시청자는 의식주 모든 분야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제안과 함께 인터넷 카페 "환경의 역습"(cafe.daum.net/tntlife)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충격만 던지고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박정훈 PD는 이에 대해 "방송에서 몇 차례 강조했듯 철저한 환기가 가장 쉽고 확실한 해결책"이라며 "집을 짓거나 고칠 때 과도한 인테리어를 자제하고 친환경 자재를 쓰는 등 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이면 머지않아 생산자의 의식도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배기ガ스 등 거리 유해 환경을 다룬 2부 "우리는 왜 이 도시를 용서하는가", 농약·살충제 등의 위험을 경고한 3부 "미래를 위한 행복의 조건" 등은 10, 11일 밤 11시에 잇따라 방송해 좋은 호응을 얻었다.[한국일보 1.5]

### 대기중 인체 악영향 오염물질 잇따라 검출

올 겨울 들어 대기에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등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한·중대기과학연구센터(센터장 정용승 교원대교수)는 지난 1월 2일 오후 한반도 전 지역 대기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작경  $10\mu\text{m}$  이하의 미세먼지  $170\mu\text{g}/\text{m}^3$  (환경기준치  $150\mu\text{g}/\text{m}^3$ )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또 일산화탄소도 1천  $230\text{ppb}/\text{m}^3$  가 검출돼 평소 300~500ppb/ $\text{m}^3$  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1일에는 미세먼지  $156\mu\text{g}/\text{m}^3$ , 일산화탄소 1천  $391\text{ppb}/\text{m}^3$  가 각각 검출됐으며 지난 12월 24일과 25일에도 환경

기준치를 웃도는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유독성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지난 12월 26일에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내몽골 동쪽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까지 밀려와 미세먼지가  $237\mu\text{g}/\text{m}^3$  관측되기도 했다.

이는 겨울철 온난화 현상으로 최근 황해의 오염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밀려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는 "최근 한반도에서 관측된 오염물질은 황해 상에서 축적된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광역적 대기 오염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환경 문제"라고 밝혔다.[연합뉴스 1.3]

### "적법하더라도 환경 침해 맨 증축제한 정당"

법 기준은 충족했지만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건물증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와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이겼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적법한 증축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현대건설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설계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서울시가 지난 1월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북구청은 현대건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지하 5층, 지상 2층 건물의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상 7층 증축을 거부한 처분은 공익의 보호를 위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주)녹아원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연경관 혼선을 막아야 한다는 구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겨레 1.12] K